

의안번호	제34호
의결 년 월 일	2025. 4. 23. (제328회)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금 산 군 수
제출년월일	2025. 4. 10.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호
------	------

제출년월일 : 2025. 4. 10.
제 출 자 : 금 산 군 수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금산군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 「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제한 대상 직급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항)
 - (기존) 4급 → (개정) 5급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한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금산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심의(안 제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 등의 설치·운영)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공문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 기타사항
 -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없음(기획예산과-2662)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과-2437)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정책과-5869)
 - 입법예고(2025. 2. 24. ~ 2025. 3. 17.) : 제출의견 없음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를 “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금산군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으로, “사람”을 “자(공무원, 민간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금산군 세입 징수포상금”을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세입징수포상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무원”을 “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각각 “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무원”을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6조의 규정”을 “제26조”로, “납기한”을 “납부기한”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제1항제1호”로, “특별공적이
라 함은”을 “특별공적이란”으로,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조세범처
벌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특별한 공로”를 “공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제1
항제1호”로, “지방4급”을 “5급”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를 “미등기”로, “찾아내
어”를 “찾아내어 군세를”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필하지 아니하고”
를 “마치지 않고”로, “필하였을 경우”를 “마쳤을 경우”로, “말한다)에는”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국공유지의”를 “국공유지를”로 하고, 같은 호 및 제7호 및
같은 항 제8호 본문 중 “경우에는”을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아니한다”를 “않는
다”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제5호까지”로 하며, 같
은 조 제1호 중 “미수금징수”를 “미수금 징수:”로, “공무원간”을 “공무원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분기지급액”을 “연간 지급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분기지급액”을 “연간 지급액”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급심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와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산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제6조 본문 중 “포상금지급은”을 “포상금 지급은”으로, “심의회”를 “위원회”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아니 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9조 중 “숨은세원발굴”을 “숨은 세원발굴”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u>	<u>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세정발전 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 본법」 제146조에서 위임한 사항 과 <u>금산군 세정발전 및 세입증 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 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지급대상)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 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u>금산군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 이라 한다)</u>을 지급할 수 있다.</u>	제2조(지급대상) ① <u>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 ----- 자(공무 원, 민간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u>금산군 (이하 “군”이라 한다) 세입징수 포상금-----.</u></u>
1. <u>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 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u>	1. ----- ----- <u>자</u>
2. <u>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u>	2. ----- ----- <u>자</u>
3. <u>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u>	3. -----

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
 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
 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
 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조세범 처벌
 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
 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
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
 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금산군세입징수포상금지
급심의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

 ----- 자
 4. -----

 ----- 자
 ② -----
제26조 -----
 ----- 납부기한 -----

 - 않는다.
 ③ 제1항제1호 -----
특별공적이라 -----
 ----- 자에게 -----
 ----- 「지방세기본
법」 -----

 ----- 공로 -----

 ----- <단서
삭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3. (생략)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누락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④ 제1항제1호-----

-- 5급 -----

- 않는다. -----

----- 그렇지 않다.

제3조(지급기준)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미등기 -----

----- 찾아내어 군세를

이런-----

----- 마치

지 않고 -----

-- 마쳤을 경우-----

-- 말한다): -----

5. -----

--- 경우: -----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
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
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
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
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
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
하여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
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
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
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
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

6. ----- 국
공유지를 -----

----- 경우: --

7. -----
----- 경우: ---

8. -----
경우: -----.
--- 「공무원 제안 규정」 ---

----- 않는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한도) -----
----- 제5호까지-----

-----.

1. ----- 미수금 징수:
-----공무원 간-----

2. ---- 연간 지급액: ----. -

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
별 분기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
하기 위하여 금산군세입징수포
상금지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
담당관, 재무과장, 세정팀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제2조부터 제4조까
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
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지급은 사
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

--연간 지급액-----
-----.

제5조(지급심의) 포상금은 「지방
세기본법」 제147조와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산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
쳐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 지급은 -
--- 위원회-----

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 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

-----.

제7조(지급방법) ① 군수-----

-----.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

-----.

을 미치지 <u>아니 한다.</u>	--- <u>않는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u> 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 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 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 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 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u>제1항</u> ----- -----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u>제43조</u> ----- ----- -----.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채납 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 지 제3호서식의 <u>숨은세원발굴</u>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갖추어 놓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 ----- ----- ----- <u>숨은 세원발굴</u> -- ----- -----.
<u>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u> <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u> <u>으로 정한다.</u>	<u><삭 제></u>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나. 관련 조문 : 제4조(지급한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나. 추계 결과(산출기초 등)

- 2025년 : 5,000천원 소요

● 산출기초 : 250천원 × 20명 = 5,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균비 100%

3. 작성자 : 재무과장 손 중 건 (☎ 750-241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지방세 징수포상금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재원 조달		-	-	-	-	-	-
의존 재원	소 계	-	-	-	-	-	-
	국비보조금	-	-	-	-	-	-
	도비보조금	-	-	-	-	-	-
자체 수입	소 계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지방세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관 계 법 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4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붙임 3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공문

다 같이 지켜요, 개인정보!



금 산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알림 및 추진계획 제출

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4828호(2024.11.27.)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8조, 제29조에 따라 86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붙임1)과 같이 개선을 권고하오니, 해당부서에서는 (붙임2,3)을 참고하여 조치기한 (2025.8.31.)내에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선권고 사항의 원활한 이행 관리를 위해 '개선권고 추진계획' 및 '최종 이행실적'을 아래와 같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제 출 자 료	제 출 기 한	비 고
1	개선권고 추진계획(붙임4)	2024. 12. 23.(월)	
2	최종 이행실적(붙임4)	2025. 9. 1.(월)	

- 붙임 1. 86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의결서) 1부.
2. 86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1부.
3. 부서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1부.
4. 개선권고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서식) 1부.
5. 부서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목록 1부. 끝.

기획예산담당관

수신자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금산다락원장, 경제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주무관 **고윤희** 감사법무팀장 **김봉균** 기획예산담당 전결 2024. 12. 9.
관 **김상현**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담당관-18546 (2024. 12. 9.) 접수 재무과-35508 (2024. 12. 9.)

우 32733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 <https://www.geumsan.go.kr>

전화번호 041-750-4036 팩스번호 041-751-6272 / warmyh@korea.kr / 비공개(5)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가나다 순)
4.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공정성 확보 [표 4] 참고 밑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	
①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규정 마련 또는 개선	
- 5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 포상금 지급제한 규정 마련 *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제한하고, 체납액 직접 징수 등 특별히 인정되는 공적인 있는 경우 지급이 가능하도록 단서 규정	(인천) 옹진군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시흥시 광주시 구리시 의왕시 동두천시, 연천군 (충남) 계룡시 부여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 (전남) 여수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경북) 칠곡군 (경남)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강원) 원주시
- 포상금 지급제한 대상 직급을 국장급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개선	(부산) 기장군 (경기)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평택시 군포시, 하남시 양평군 (충북) 제천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청양군 예산군 (전북) 군산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전남) 목포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함평군 영광군 (경북)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고령군 예천군 (경남)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거창군 (강원) 삼척시
②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개선	
- 공적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마련 * 외부위원 참여 명시를 포함	(부산) 기장군 (경기) 의왕시 (전남) 장흥군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 참여 명시	(인천) 옹진군 (경기) 고양시 성남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광주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충북)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전남)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경북)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경남)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강원) 원주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영월군 양양군
③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 대한 환수규정 마련	
- 포상금 환수규정 마련	(부산) 기장군 (전남) 장흥군, 강진군
- 포상금 환수 시 이자가산 규정 마련	(인천) 옹진군 (부산) 기장군 (경기) 동두천시 연천군 (충북) 옥천군 (충남) 아산시, 청양군 (전북) 남원시, 무주군 (전남) 여수시,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경남) 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강원) 속초시, 삼척시
④ 행정착오를 원인으로 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환수규정 마련	
- 포상금 환수규정 마련	(인천) 옹진군 (경기) 고양시 (전남) 여수시, 장흥군, 강진군
- 포상금 환수 시 이자를 가산하지 않도록 개선	(전북) 익산시 (강원) 원주시

4.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공정성 확보

평가대상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등

□ 문제점

- ① 징수포상금은 체납징수 공무원 사기진작 및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실무자가 아닌 국·과장급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 경기 고양시 등은 관리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이 없어 운영 목적에 맞지 않게 관리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
 - ※ 관리자가 사익을 위해 실무자들의 체납 징수실적 또는 은닉재산 정보 등을 가로채는 부당행위 발생 가능성 상존
 - 충남 천안시 등은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기준을 국장급(4급) 이상으로 정해 관리자에 해당하는 과장급 누락
- ②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공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 부산 기장군, 경기 의왕시, 전남 장흥군은 공적심의위원회가 없어 지자체장의 재량권 남용 및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확보 곤란
 - 충남 천안시 등은 외부위원 없이 내부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적을 심의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객관성·공정성 저해 우려
- ③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포상금 환수금에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 기간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함이 타당함에도
 - 부산 기장군 등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포상금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어 포상의 공정성·영예성 훼손 우려
 - 경기 연천군 등은 환수 규정에 이자가산 규정이 없어 재정 누수 가능성

- ④ 행정청 착오를 원인으로 인해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고, 환수 시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에도
- 인천 옹진군 등은 환수 규정이 없어 재정 누수가 우려되고, 전북 익산시 등은 환수 시에 이자를 가산하도록 해 국민에게 불합리한 재정적 부담 전가 우려

□ 개선방안

- ①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규정 마련 또는 개선
- 경기도 고양시 등은 5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규정 마련
 - 충남 천안시 등은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대상 기준을 5급(과장) 이상으로 개선
- ※ 관리자에 대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체납액 직접 징수 등 특별히 인정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지급이 가능하도록 단서로 규정
- ② 포상금 지급의 적합성 확보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개선
- 부산 기장군, 경기 의왕시, 전남 장흥군은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 마련
 - 충남 천안시 등은 공적심사위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참여를 명시
- ③ 부산 기장군, 전남 장흥군, 강진군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한 환수 및 이자 가산 규정 마련하고, 경기 연천군 등은 포상금 환수 시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 개선
- ④ 인천 옹진군, 경기 고양시 등은 행정청의 착오가 원인이 되어 지급된 포상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마련하고, 전북 익산시 등은 해당 포상금 환수 시 이자가산 규정 삭제